김용구 또 다른 비리 확인…조만간 추가 기소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건설업체 2곳서 자문료 명목 4억6500만원 받아

광주시 물품 수의계약 브로커 개입 등 면밀 조사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의 또 다른 비리 사실을 확인,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20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 전 자문관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광주시 현안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각각 1억4000여만원과 3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 건설사는 김씨를 통해 송정역 환승복합센터와 남구 첨단도시산단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설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용역계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건설사들은 불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알선 대가 명목이 아닌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에도 모 재단법인 명의로 '정부 3.0 조직문화 개선 사업' 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대금 9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재단 명의를 빌려 광주시 공무원을 속이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조만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자문관 비리 외에 광주시 물품 수의계약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에 대한 2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돈의 흐름(계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의계약 과정에 브로커가 끼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전남지역 중소건설업체인 S건설로부터 1억9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도 광주시 납품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 비서관은 김씨의 친동생이다.

한편,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건설사 관계자, 광주시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깡'

순천시의원 6명 적발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한 뒤 현금을 나눠 가진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순천경찰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를 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나눠 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업무상 횡령)로 순천시의회 올해 상반기 예결위원장 A(53)씨 등 6명의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98만5000원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소속 시의원들에게 7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카드깡'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전액 회수해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같은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14~2016년 상·하반기 예산결산위원회로 수사를 확대해 위원장 4명과 간사 1명이 같은 수법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후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만~10만원을 나눠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 6명의 의원이 '카드깡'으로 돌려받은 돈이 모두 500만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교실 옆 3층 베란다서 여고생 추락사망

학교측 위험한 공간 출입통제 제대로 안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여고생이 3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베란다는 평소 학생들의 출입이 잦아 추락과 같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지만 해당 학교 측은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남부경찰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26분께 광주시 남구의 한 고등학교 건물 3층에서 A(16·고1)양이 추락했다. A양은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일 새벽 2시45분께 숨졌다.

경찰과 학교 측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양이 친구 2명과 교실 옆 3층 베란다 난간에서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측은 "3층 베란다는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평소 아이들이 청소를 할 때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평소에도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육·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의 해명과 달리 해당 공간은 평소 학생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만큼 출입이 잦았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아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숨진 A양도 사고 당일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 이 곳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지만 교직원의 제재나 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해놨다는 학교 측의 해명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 학생은 "3층 베란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적은 없고, '출입금지' 문구도 어제(19일) 사고가 나자 오늘(20일) 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51명 임금 9억 체불

도주한 사업주 추적

검찰이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50대 사업주를 쫓고 있다.

2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뒤 도주한 사업주 K모(59)씨의 뒤를 쫓고 있다. K씨는 근로자 51명의 임금 등 9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업주가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청구한 구속영장이 최근 발부됨에 따라 사업주 검거를 위해 다각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상습·고액 체불 사업주 구속 원칙 등 악성 체불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 광주고용청 관내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는 6074명, 체불임금은 2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약 110억원(55%)은 해결됐고, 나머지 미청산 90억원과 관련해서는 체불 사업주를 사법처리했거나 수사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문화전당서 영호남 장애인 화합 제16회 영호남 장애인 화합한마당이 20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광주와 대구지역 참가자들이 문화전당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친 살해 시신 유기 1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 남친에게 항소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의 천변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대·전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복지부, 2세아 사망 책임 물어

중증외상을 입은 2세 소아를 타 병원으로 보내거나 환자 받기를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지난 9월30일 교통사고를 당한 두살배기 김모군이 정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북대병원의 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더불어 이송 요청을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은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이 수술실이 꽉 차, 같은 사고로 내원한 김군과 외조모를 동시에 수술할 수 없어 김군을 전원 보내기로 했으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전북대병원은 응급의료수가 청구와 평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권역외상센터 중 전원을 의뢰받은 전남대병원은 지정취소, 을지대병원은 처분유예 결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전남대병원이 소아미세혈관접합수술 전문의가 없어 환자를 받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6개월 동안 개선 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6개월 동안 약 9억원의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지만, 병원 자체적으로 외상센터를 정상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남대병원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지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무조건 정부의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 보완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임대료 왜 안줘"…차량 번호판 무단으로 떼어간 운송업체 대표

쌍나팔

○…차량 임대료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대여해 준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간 화물운송업체 대표가 경찰서행.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체 대표인 이모(60)씨 등 2명은 지난 3월29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주차장에서 설모(57)씨에게 임대해준 화물차량(11.5) 앞·뒤 번호판 2개를 설씨의 허락없이 떼어내 다른 화물차량에 부착한 혐의.

○…이씨는 계약에 의해 화물차량을 빌려간 설씨가 매달 26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100만원 가까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떼어 갔는데, 경찰은 "번호판이 계약에 의해 설씨에게 대여된 상황에서 무단으로 떼어가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매 매

경매

장례식장 감정가 116억 8천만, 최저가 116억 8천만
서구 매월동 / 대지 2912평 건물 1311평 / 자연녹지지역 / 40m도로접 / 주차장 완비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세차기 / 3기 6구

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접 / 해변 전망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접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접 / 보성강 전망

매매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운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 주 성